

2025 한맥 서성수 선생님

바다 국어 비문학

기출 분석



BADA

한맥국어학원



INDEX

01	핵심 요약	P 1
02	기출 적용	P 2
03	성수쌤 강의록	P 5
04	해설	P 12
05	필기노트	P 15

성수쌤의 칠판 ^{차주}

내용 정리

- 1문단 과세 표준의 개념과 세율의 종류
- 2문단 구체적 세율 계산과 세율 구조의 종류
- 3문단 공리주의자 밀의 주장과 후대 학자들의 논의
- 4문단 절대 희생 균등 원칙의 한계 및 문제점
- 5문단 비례 희생 균등 원칙의 적용
- 6문단 한계 희생 균등 원칙의 적용

시즌2에서 꼭 해야 하는 것-독해

- 경제 지문의 빈출 스키마 행동강령 사용하기
- 1) 문제 해결 schema4
- 문제-정책=>효과=>목적의 구조 떠올리기
- * 목적에 별표 치기
- 정책 효과 목적에 위아래 화살표 or 숫자 계산하기

시즌2에서 꼭 해야 하는 것-문제 풀이

- 그래프 문제 풀이에서는
- 자잘한 표현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 √ Pt Px 이러한 것에 집중하지 말기

2) 비교 대조 schema1

- 표 준비(여러 명/ 한 명~두 명) 
- * 공통점 별표
- 차이점 빠진 건 추론 해 보기

3) 그림

- 지문 읽기 전
- xy에 무엇
- xy의 관계와 정도
- * 그래프나 점의 이동과 차이

글이랑 같이 보기

- 글의 내용 그대로 연결하기

성수 쌤만의 추가 내용 - 시즌3 미리보기

- 비교 대조에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 문제 해결에서 다양한 변수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문제!

문제 먼저 볼 때 효능감이 있기 위해서는

- * 어떤 문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꼭 정리되어야 함

40초 이내로

- 일치 추론 선지 반복되는 것-> 사람 기준
- A,B 선지 반복되는 것-> 기준
- 보기 선지 반복되는 것-> 사람 기준/인과 관계 요소
- 네모 문제의 네모-> 핵심 개념

실제 적용 재정학 지문

- 절대 한계 비례 비교 대조
- 과세 표준 세율의 관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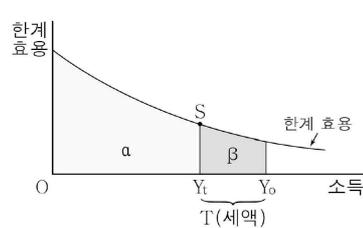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①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¹⁾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②산출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 세율 등이 있다.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 보자.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0%라 하자.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획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1천만 원×0.1(10%)+2천만 원×0.2(20%)=5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약 16.7%(5백만 원/ 3천만 원)가 된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이를 균등 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누진 세율 구조를 ③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희생이란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이다.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후대 학자들은 균등의 의

미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에 ④입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 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_0 였던 사람이 세액 T 를 내면 세후 소득이 Y_1 로 줄어든다.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β 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그림>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

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누진 세율 구조라고 ⑤ 단정하기 어렵다. 절대 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 세율 구조가 ⑥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진 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이는 <그림>에서 면적 β 를 면적 $a+\beta$ 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 누진 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지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 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_1S 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

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어휘 풀이] 1) 공제 : 받을 뒀어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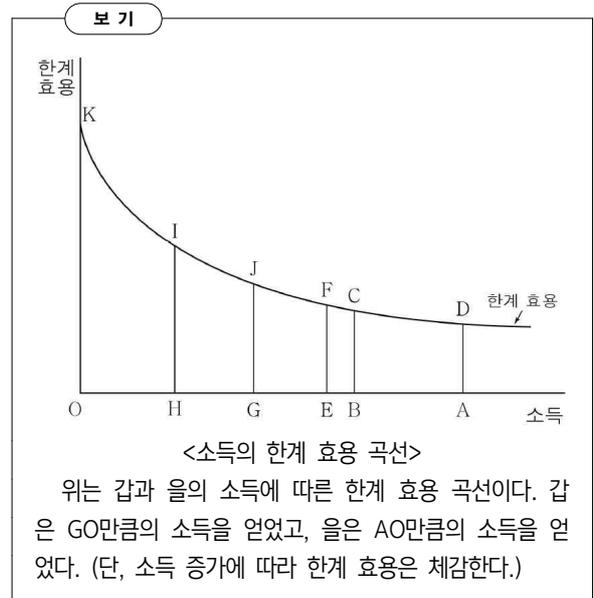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본질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 부과 효율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누진적 조세 부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조세 부담의 공정성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며 조세 행정의 목적을 효율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세율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서의 균등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2.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평균 세율보다 실효 세율이 더 낮다.
- ② 납세 부담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 ③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에 비례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 ④ 세액 산출 시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누진 세율 구조인지의 여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갑과 을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 ②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과 을이 내야 할 세액이 각각 GH와 AB라면 GHIJ의 면적과 ABCD의 면적이 같아지도록 GH와 AB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AEFD / AOKD일 때에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 을에게 AE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 ④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이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일 경우 GH를 GO로 나눈 값과 AB를 AO로 나눈 값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 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의 세액이 GH라면 을의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이 HI가 되도록 을에게 AH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은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②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③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만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④ 동일한 소득이라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5.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득세 제도			
과세 표준	[가]	[나]	[다]
100만 원	10만 원	3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6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위에 제시된 표는 어떤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소득세 제도 [가]~[다]와 그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다. (단, 과세 표준은 위의 3가지 경우만 있다고 가정한다.)

- ① [나]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② [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역진 세율구조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이다.
- ⑤ [가], [나]와 달리 [다]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세율 구조이다.

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계산하여 냄.
- ② ㉡ :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 ③ ㉢ :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섬.
- ④ ㉣ :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⑤ ㉤ :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의가 제시되며 글이 시작된다.

세원: 조세 부과 원천, 소득은 세원 중 일부, 세원은 조'세'의 '원'천이며 소득이 아닌 세원도 있음

또 예시가 등장하고 있기에 개념을 연결/ 세원 전체가 아니기에 별표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 소득 전체 아님- 세원 전체 아님 ← 공평 / 동일 만족감 동일 조세 (원인)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리고 납세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정의가 등장하고 있기에 정리해두자. 정의가 많이 등장하는 글은 천천히 읽어야 하며 표시와 연결에 집중하자.

과세 표준: 총소득- 일부 공제 & 세율 적용되는 소득

납세 부담액 = 세액 = 과세 표준* 세율 = (총소득- 일부)* 세율

정의가 이렇게 '공식'으로 등장할 때 '인과지문 읽기법' 즉 증가와 감소까지 확인하자. 공제액이 커지면 납세 부담액이 줄어든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 세율 등이 있다.

앞에서 확인한 대로 정의가 공식으로 등장하기에 '연결'과 함께 인과지문 읽기법 즉 '증가와 감소'까지 확인하자!

한계 세율: Δ 세액(세액의 증가분) / Δ 과세 표준, 세액의 증가분↑ 한계 세율↑

평균 세율: 세액 / 과세 표준 = 세액 / (총소득- 일부), 공제↑ 평균 세율↑

실효 세율: 세액 / 과세 이전 총소득 = 세액 / 총소득, 총소득↑ 실효 세율↓

정의를 통해 정보를 쏟아내고 있기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책과 효과 등의 인과가 등장할 것이다.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 보자.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0%라 하자.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1천만 원×0.1(10%)+2천만 원×0.2(20%) =5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약 16.7%(5백만 원/ 3천만 원)가 된다.

한계 세율, 평균 세율, 실효 세율의 개념은 말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기에 예시가 등장하고 있다.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의와 마찬가지로 공식이 구체화되고 있기에

'인과 지문 독해법' 즉 '증가와 감소' 파악 '구체적 계산'까지 해야 한다.

앞서 정리한 세액에 대한 식 즉 '납세 부담액 = 세액 = 과세 표준* 세율+ (총소득- 일부)* 세율을 적용해

$1000*0.1 = 100$, $2000*0.2 = 400$, 따라서 총세액은 $100+400 = 500$

평균 세율은 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것이기에 1/6 16.7퍼센트 이렇게 적어보기

과세 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계속해서 정의가 등장하고 있기에 체크하고 설명과 연결하자. 특히 증가와 감소를 말하는 정의이기에

이를 꼭 정리해야 한다

누진 세율 구조 : 과세 표준↑ 세율↑, '평균 세율↑'

비례 세율 구조 : 과세 표준↑ 평균 세율 유지

역진 세율 구조 : 과세 표준↑ 평균 세율↓

참조) 그런데는 전환의 연결사로 뒤에 글쓰기가 하고 싶은 말이 등장한다

인과적 읽기도 필요한 정의/예시가 반복되기에 이에 대해 주의하면서 글을 읽었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비교 대조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이를 균등 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누진 세율 구조를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희생이란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이다.

대다수 국가의 소득세 : 누진 세율 구조 ← 공평 /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 (이유)

공평함이 목적임을 알아 두자 추가로 정의가 등장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밀이 바라본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 효용의 손실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한다고 봄 : 균등 희생 원리

희생 = 총효용의 감소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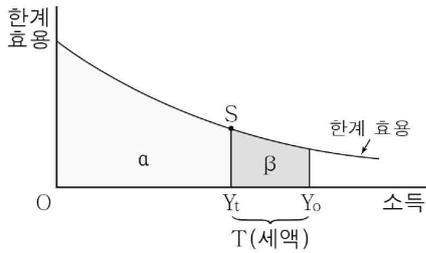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후대 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앞서 정리한 비교 대조가 드디어 등장했다, 구분이라는 표현을 보면 바로 표를 그릴 생각을 해야 한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만이 효용을 결정 - 효용은 측정 가능 -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 - 모든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 동일 		
기준			
기준			

여러 명이 등장했기에 이제 기준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고 빈 부분은 추론을 통해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 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그림'은 과학 기술 경제 지문에서 꼭 활용해야 하는 정보이다.

그림은 글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

글을 읽으면서 활용해야 하는 자료이다. 이 부분에서는 글을 읽으며 그림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글의 어려운 내용 즉 개념과 인과적 과정(증가 감소/ 구체적 계산)을 그림 위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소득의 한계 효용이 등장했기에 이를 정리하자

소득의 한계 효용 = Δ 만족의 정도 / Δ 소득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_0 였던 사람이 세액 T 를 내면 세후 소득이 Y_t 로 줄어든다.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β 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누진 세율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절대 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 세율 구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진 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림' 위에 그 내용을 옮겨가며 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기에 세전 소득에 세금만큼 줄어서 Y_t 위로 옮겨야 한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 희생의 절대적 크기 = 희생의 절대량 = β 가 동일 해야 함

이 부분은 밑에 등장한 배경지식을 활용해도 되나지만 자체에 나와있는 내용이기엔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절대 희생 균등에서 누진 세율 구조 ←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팔라야 함

누진 세율 구조를 위한 전제이자 조건이 등장했기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울기가 가팔라야 소득이 증가할 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게 되기에 이러한 조건을 덧붙인 것이다. 조건이 공식과 같은 형태로 등장하였기에 정리해두고

나중에 보기 등의 문제로 풀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한다.

완전한 배경 지식) 한계는 한 단위 더 했을 때의 변화

피자를 하나도 안 먹었을 때에서 하나 먹었을 때 이득이 10만큼 늘면 한계 효용은 10

피자 한 조각 먹은 이후에 또 한 조각 먹을 때 즉 한 조각에서 두 조각이 되면 이득이 5만큼 늘 한계 효용은 5

피자 두 조각 먹은 이후에 또 한 조각 먹을 때 즉 두 조각에서 세 조각이 되면 이득이 1만큼 늘 한계 효용은 1

3조각의 총 효용은 $10 + 5 + 1 = 16$

한계 효용을 다 합치면 총효용이 되는 것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이는 <그림>에서 면적 β 를 면적 $\alpha+\beta$ 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 누진 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 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래의 표를 채워주어야 한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만이 효용을 결정 - 효용은 측정 가능 -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 - 모든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 동일 		
균등 의미	β	$\beta / \alpha+\beta$	
누진 기준	한계 효용 곡선 가파르게 체감	한계 효용 곡선 체감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해야 함

비례 희생 균등에서 누진 세율 구조 ← 한계 효용 곡선 체감

이렇게 표의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tS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 공제 : 받을 뒀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계속해서 아래의 표를 채워주어야 한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만이 효용을 결정 - 효용은 측정 가능 -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 - 모든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 동일 		
균등 의미	β	$\beta / \alpha + \beta$	과세 이후 한계 효용 같음
누진 기준	한계 효용 곡선 가파르게 체감	한계 효용 곡선 체감	

결국 그래프에서 한계 효용 값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

지문에 이 부분이 나와 있기에 선분 YtS의 길이를 기억하고 그래프 위에 적어두자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은 조세 이후에는 모두 동일한 효용을 지니게 된다.

5강

SCHEMA 3 인과적 과정

5강

인과적 과정 - 경제

재정학 2020 4월 고3 모의고사

빠른 정답 ⑤ ③ ④ ① ⑤ ⑤

들어가기 전 RE - CHEMA

① 문제 - 해결 (경제 VER)

- 문제 → 정책 ⇒ 효과 ⇒ 목적(최종 결과)
- 정책 효과 목적에 ↑ ↓
- 목적에 별표

② 비교 대조

- 표 그리기

여러 명 / 한 명

- 표 채우기

1. ⑤

①	②	③	④	⑤
4%	3%	7%	3%	83%

해설 성수T

조세와 관련하여 과세 표준, 한계 세율, 평균 세율, 실효 세율 등 여러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공평한 조세 부담을 위한 밀의 균등 희생 원리를 언급하면서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서의 균등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성수T

- ① 조세의 본질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② 조세 부과의 효율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의 변천 과정 역시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③ 조세 행정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④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③

①	②	③	④	⑤
6%	4%	79%	5%	5%

해설 성수T

3문단에서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에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까닭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진 세율 구조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성수T

- ① 평균 세율은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실효 세율은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보다는 과세이전 총소득이 더 크다. 따라서 평균 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다.
- ② 1문단에서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세율 구조에 대한 정보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따라서 누진 세율 구조인지의 여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3. ④

①	②	③	④	⑤
5%	14%	16%	54%	10%

해설 성수T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은 과세 이전의 총효용에서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 즉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 갑의 세액이 GH라면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은 $\frac{GH}{GO}$ 가 아니라 $\frac{GHU}{GOKJ}$ 가 된다. 또 을의 세액이 AB라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은 $\frac{AB}{AO}$ 가 아니라 $\frac{ABCD}{AOKD}$ 가 된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갑과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인 $\frac{GHU}{GOKJ}$ 와 $\frac{ABCD}{AOKD}$ 가 동일해야 균등한 희생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성수T

- ①, ②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은 각 개인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 갑의 세액이 GH라면 갑의 희생의 절대적 크기는 GHU가 되고, 을의 세액이 AB라면 을의 희생의 절대적 크기는 ABCD가 된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두 면적이 같아야 균등한 희생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 된다면, 즉 한계 효용의 크기가 같게 된다면 갑의 세액인 GH와 을의 세액인 AB가 같아야 면적 GHU와 면적 ABCD가 같게 된다.
- ③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아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frac{AEDF}{AOKD}$ 일 때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고 했으므로 을에게 AE만큼의 세액을 부담시켰을 때 갑과 을의 희생 비율은 동일해진다.
- 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은 과세 이후에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있어 동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 갑의 세액이 GH라면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갑의 한계 효용은 H이다. 을에게도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해야 하므로 을에게 AH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4. ①

①	②	③	④	⑤
83%	5%	4%	5%	3%

해설 성수T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은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해설 성수T

- ② ①은 부양가족의 유무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②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
- ③ ①은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탈세를 막는다는 내용 역시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 ④ ①은 동일 소득이라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④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
- 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①의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

5. ⑤

①	②	③	④	⑤
7%	8%	10%	12%	63%

해설 성수T

(가)는 세율 10%를 적용한 비례 세율 구조, (나)는 세율 30%를 적용한 비례 세율 구조, (다)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 세율 구조이다. (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 표준 100만 원의 세율은 10%이고 과세 표준 200만 원의 세율은 15%, 과세 표준 300만 원의 세율은 20%이므로 과세 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 (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세율이 동일한 반면, (다)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이 낮다.

해설 성수T

- ① (나)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과세 표준에 세율을 동일하게 30%씩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 ② (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고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역진 세율 구조가 아니라 누진 세율 구조이다.
- ③ (가)는 비례 세율 구조로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나) 역시 비례 세율 구조로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④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는 (가), (나)이다. (가), (나)는 비례 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6. ⑤

①	②	③	④	⑤
2%	2%	2%	2%	93%

해설 성수T

㉔의 '성립'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 짐.'이다.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는 '진보'이다.

해설 성수T

- ① '산출'의 사전적 의미는 '계산하여 냄.'이다.
- ② '옹호'의 사전적 의미는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이다.
- ③ '입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섬.'이다.
- ④ '단정'의 사전적 의미는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이다.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S2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연결: 전체가 아니다 결과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원인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리고 납세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S2

과세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세율에

는 세액/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 세액/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 세율 등이 있다.

행동강령1 지문을 훑고 대략적 스키마(핵심 스키마) 예츨
철학 음악 언어 비교 대조
법개념 반복
경제 과학 기술 인과적 과정

행동강령2
문제를 통해 스키마 구체화
스키마 스키마2
내용

참조)
문제는 빠르게 다 읽기
선지는 보기만 읽어보기+ 인문은 적절한 것 추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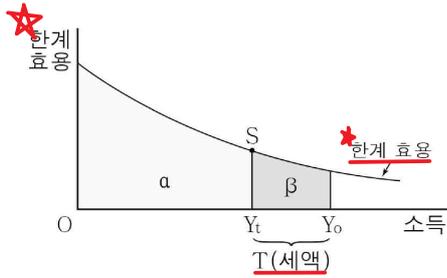
행동강령3
문제를 통해 끝을 부분 확인하고 지문 읽기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 보자.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0%라 하자.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1천만 원×0.1(10%)+2천만 원×0.2(20%) =5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약 16.7%(5백만 원/ 3천만 원)가 된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S2 별표 연결 최대한 간단한 예시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S3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결과}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
원인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
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이를 균등 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
S2
해 누진 세율 구조를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희생이란 ~~재액 지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이다.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후대 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 균
공통점
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
8 C
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의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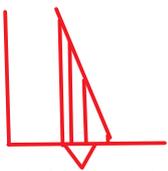
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배경지식 알아두기
 한계 한 단위 더
 결국 한계를 다 합치면 전체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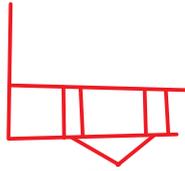
<그림>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_0 였던 사람이 세액 T 를 내면 세후 소득이 Y_t 로 줄어든다.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β 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누진 세율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절대 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 평균 세율이 점차 커져야 함으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 세율 구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진 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S2
예를 그려보기



세액에 큰 차이가 남
평균 세율이 더 커질 수 있음



큰 차이가 나지 않음
평균 결국 세액차이가 크지 않음
소득은 큰 차이
평균 세율이 줄어든다고 하기 어려움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이는 <그림>에서 면적 β 를 면적 $\alpha+\beta$ 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 누진 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 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S2 예시가 부족하기에 최대한 간단한 예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tS 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2025 겨울방학

한맥국어학원